

수사가 주춤거려서는 안된다

정의기억연대가 운영해 오던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 관리소장이 최근 자살로 보여지는 사망을 했다.

고인의 죽음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도 깊은 애도를 표한다. 다만 고인이 스스로 그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원인이나 책임에 관하여 정의연 관계자나 윤미향 본인 그리고 범여권 일각에서 검찰 탓, 언론 탓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도 어렵고 실소를 금할 수 없다.

그보다는 과거 위안부 할머니 별세 당시 고인의 개인 명의 구좌를 이용해서 조의금을 거둔 것을 비롯하여 정의연의 어두컴컴한 회계관리 등 현재 문제가 된 각종 비리의 의혹을 자초하고 그로 인해 고인을 조사의 대상으로 만든 사람들이 우선 죄책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

윤미향과 정의연에 대한 이번 수사는 검찰이 자의적으로 시작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시작이 된 것인지는 세상이 다 안다. 악의 무리들은 고인의 죽음으로 비리 추적의 고리가 끊어지기를 바라겠지만, 고인의 극단적 선택이 윤미향과 정의연에 대한 이번 수사의 물타기나 입막음 작용을 하게 만드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.

검찰은 절대 주춤거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계속하여 비리가 득세하는 세상에 정의를 세우라.

2020. 6. 9.

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(한변)
회장 김 태 훈, 공동대표 석동현